

12·29 제주항공 참사·영남 산불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

여야 민생법안 11건 합의 처리
중앙합동지원센터 근거 마련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등 의결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은 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산불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 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론판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토론판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투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순천대 '통합 재투표' 적극 참여 촉구

"국립의대 설립 분수령"

전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15일 순천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합대학교 추진 재투표'와 관련 "이번 재투표는 변화한 정부 정책 환경 속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향방을 가를 매우 중대한 절차"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단계로 넘기며, 정책 결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투표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명확해진 국가적 방향 속에서 대학 구성원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대내외에 분명히 전명하는 과정"이라며

대내외에 분명히 전명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교육부의 통폐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전남의 강력한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정부 정책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며 "대학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낼 때,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현실로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대는 앞서 한차례 부결된 목포대와 통합 찬반 재투표를 16일 진행한다.

정근산 기자



정청래 대표, 민주 의원총회 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특검 10년 구형...방송 생중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

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에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평·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폐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연합뉴스

정준호 의원 "무안공항 관제사 월 300시간 이상 과로"

참사 당시 인력부족 심각

무안국제공항 관제사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관제사들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282.7시간으로 집계됐다. 최대 근무 시간은 328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15개 다른 공항 관제사들의 월평균 근무 시간(약 220시간)보다

다 100시간 더 많았다.

관제사가 월 30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의 횟수도 갈수록 늘어났는데, 2022년 4회·2023년 6회·2024년 9회로 초과근무가 빈번해졌다.

인력도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산출한 무안국제공항의 적정 관제 인력은 17명이지만, 참사 당시 11명이 부족한 6명이 근무해 전국 관제소 중 인력 충원

율(35.3%)도 가장 낮았다. 항공 교통량 증가로 관제 업무 증가에 예상되는 만큼 무안국제공항에는 관제사 9명을 추가 총원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1명만 총원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관제사의 장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은 단순한 근로환경 문제가 아닌 항공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제 근무시간 제한을 국토부 고시가 아닌 법률상 강행 규정으로 상향하고, 국제 권고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전진숙 의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둔덕은 장애물"

국토부 정보 미제공 '위법'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 정보로 조종사들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공항시설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29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로컬라이저와 그 기반인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시설법상 (2조 14호)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과 지물을

지정하고 장애물 설치 등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법에 명시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과(5조 2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4조)에 따라 수평표면과 원주표면, 진입표면과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과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구분된다.

전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장애물 제한표면인 '전

이표면'에 설치돼 있어 장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55조 5항, 7항)에는 항공교통업무 일환으로 위험 물에 대한 항공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항공정보는 항공정보간행물과 회람, 비행 전·후 정보에 포함되고 비행장 애물에도 발간돼야 한다.

전 의원은 "만약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됐더라면 여객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농심

자연정수기간 40 YEARS

자연에서 40년을 거르고 걸려
신선하고 건강해진 백산수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천지차이 백산수